

꿀찌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67개국 중 대한민국 64위, 100점 만점에 29.98점. 참담한 수준이다. 우리보다 못한 65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66위 이란, 67위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보다 조금 앞선 63위 러시아, 이들 국가는 세계적인 산유국들이다. ‘기후변화대응 지수(CCPI) 2024’에 의하면, 꿀찌그룹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소극적이다. 언론은 이들은 ‘기후악당’이라고 칭했다.

지난 8일 독립적인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German Watch)가 COP28(28차 유엔기후총회)이 개최되고 있는 UAE의 두바이에서 국제기후행동네트워크(CAN)와 함께 금년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발표했다. 2005년 이래 매년 이맘때 기후총회에서 발표해 왔다. 금년 평가대상 국가는 지구 온실가스의 90%를 배출하는 63개국과 유럽연합, 전체 64개국이다. 평가는 4개 부분으로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이용, 기후정책 등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대상 국가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점수를 매겼고 이를 합산했다. 1위에서 3위까지는 선정하지 않았다. 이상적인 정책을

퍼는 국가는 비워뒀다. 4위가 실질적으로 모범적인 1위 국가이다.

금년 CCPI의 4위 국가는 덴마크로 75.59점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가장 모범적인 국가이고, 5위는 에스토니아다. 유럽연합 국가들인 네덜란드(8위), 스웨덴(10위), 노르웨이(12위), 포르투갈(13위), 독일(14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유럽연합도 16위로 성적을 보였다. 세계 최대의 배출국 중국과 미국은 각각 51위와 57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가장 모범적인 재생에너지 국가지만 전 세계 석탄의 50% 내외를 소비하는 국가여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큰 성과를 내고 있으나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1인당 온실가스 아주 높아서 중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은 64위. 지난해 63개국 중에 60위였다. 사실 발표 때마다 꿀찌그룹을 맴돌고 있다. 이 그룹은 화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산유국들로 화석에너지로 국부를 축적할 뿐, 온실가스 감축 혹은 탈탄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해온 국가들이다. 한국은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그런 우리가 석유 부국들 틈새에서 끼어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이 세계 속에 한국의 현주소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1인당 배출도 연간 13톤 내외로 세계 평균의

두 배를 배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저탄소 혹은 탄소중립을 말해 왔지만 반대를 길을 걸어왔다는 의미다.

‘CCPI 2024’에 의하면, 한국은 2030년까지 금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다. 노후화된 석탄발전을 대부분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와 가스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의 석유 가스 개발에도 막대한 금융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도입은 OECD국가 중 꼴찌이다. 정부가 2030년 40% 온실가스 감축, 2050년 탄소제로 등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혹한 평가를 받는 이유일 것이다.

꿀찌그룹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정부와 국회 등 정책결정권자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가져야 한다. 화석에너지 의존형 경제사회 구조의 탈탄소화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가 가진 ‘2030 40% 감축, 2050 탄소중립’에 합당한 세부적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2050년 화석에너지 퇴출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및 에너지 효율성 2배 확대를 국가의 시책으로 받아야 한다. 화석에너지 금융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대폭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꿀찌그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사진으로 보는 세상

10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 도로 인근 이동식 주택들이 토네이도로 인해 파괴돼 있다. 지난 주말 테네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6명이 숨지고 최소 20명이 다쳤다. 내슈빌=AP/뉴시스

서석대

지난 대선때 확 끓어올랐다가 한동안 잠잠하던 남녀 갈등, 정확히는 남녀 혐오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번에도 게임 쪽이다. 넥슨이라는 게임회사에서 하청업체에 의뢰한 영상에 혐오 제스처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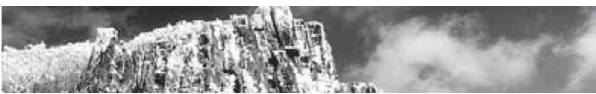
해당 논란은 11월25일에 발생한 것으로 스튜디오 뿌리 소속 팀장급 애니메이터인 뎡서가 X(전 트위터)에 과격한 남성혐오성 관련 트윗을 작성하거나, 관련 트윗을 리트윗했던 과거 행적들이 네티즌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스튜디오 뿌리에서 외주를 맡은 애니메이션 다수에서 남성혐오 이

스터에그로 의심되는 장면들이 발견됐다. 그 다음부터는 점입가경이다. ‘남성혐오 이스터에그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남성혐오가 아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압박이다’, ‘남자가 그랬다’ 등의 인터넷 설전과 더불어 신문 지상에도 보도가 됐다.

정치부 기자로서 해당 논란에서 한걸음 벗어나 본다면, 정말 이상한 현상이다.

혐오 혹은 비난할 대상은 다른데 있는 엉뚱한 이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해대는 형국이다.

본질적으로 보자. 여성의 권위가 약하고 압박받는다면, 이를 통한 이득을 얻는 이가 있어야 한다. 뒤집어서 남성에



대한 혐오가 이치에 맞다면 은근 슬쩍이 아니라 당당히 내놔야 할 것이다. 구태여 의심을 살 행동을 먹고 사는 현장에서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태어날때부터 선택받지 않는 이상, 출발선상부터 불합리와 핸디캡을 안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청춘들에게 “네가 실패하는 것은 네가 게을러서”라면서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학교와 사회가 있다.

진짜 혐오의 대상, 혹은 비난의 대상은 청년들이 오롯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거기서 희망을 얻을수 있도록 조성해주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어야 한다.

청춘들의 건전하고도 치열한 사회에 대한 고민과 삶에 대한 노력은 그 사회의 자양분이며 미래다. 우리 청춘들이 기껏해야 집값 걱정과 학비, 남녀간 혐오만을 부르짖는다면 우리 사회에 발전이 있을까.

아울러 이런 혐오는 왜 선거철만 되면 확대 생산되는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집소봉대가 다반사다. 확실히 혐오가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돈이나 권력이 되나보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도 이번 선거의 또다른 이벤트인 듯 싶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지지부진 선거제 개선 민주당 책임이다

예비후보등록일 ‘혼선’ 여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말까지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를 확정 짓겠다’고 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꼭 120일 전이다. 총선이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도 역대 최다의 예비후보가 몰릴 것이라고 한다. 제도의 유·불리를 떠나 이제서야 선거제를 바꾸겠다는 국회 제1당의 단일한 인식이 안타깝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15일까지만 합의되면 이후에는 언제든지 정개특위 절차나 본회의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당초 대선 때 약속한 것은 위성정당 방지를 막고 그 다음 연동형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인데 여당의 비협조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진 만큼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면 당내 의견을 본격적으로 물어야 될 것 같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앞서 그는 연동형 비

례제 도입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선거제와는 별개로 선거구 획정 작업도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일은 지난 4월 10일이다. 하지만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예정자와 유권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 당장 2석인 순천광양곡성구레갑·을이 순전갑·을과 광양곡성구레 등 3석으로 늘어나고 목포·나주화순·해남완도진도·영암무안신안 등 4개 선거구는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개로 합쳐진다. 예비후보 등록을 눈 앞에 두고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선거 제도는 또 어떻게 결정될 지 모르는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인 셈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당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기한내에 바꾸는 것이 옳다. 선거제도 개선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원칙도 약속도 내팽개친 채 선거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지역소멸’ 막는 고향사랑기부 지속돼야

전남 100억 돌파…목표 미달

지역소멸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전남도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실적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략적 홍보, 답례품 선정, 기금사업 발굴, 타 기관과 협력 등 선제적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도내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한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더할 나위 없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답례품 선정, 대국민 홍보, 기금사업 선정 등 제도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길길이 멀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취지의 ‘고향 납세제’를 운영중인 일본의 경우 시행 첫해인

2008년에 기부금 865억 원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정착돼 2021년 8조 3024억 원으로 100배 수준으로 늘었다.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시행초기 모금실적이 우수한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노력에 비해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도의 목표치인 161억 2500만 원에 크게 밀린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 각계각층의 동참행렬로 고조됐던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한 채 도입1년새 고향 사랑 열기가 식어가는 듯해 안타깝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30%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기부 금액이 2000~30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전국 지자체 중 전남이 높은 실적을 보인 만큼, 고향사랑 기부 행렬이 지속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법인 참여 확대, 기부액 상한선 폐지, 지자체 홍보제한 등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소멸을 막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